

2008년 하반기 WPO · EAI 동아시아연구원 · 경향신문 공동 국제인식조사
EAI 여론브리핑 38호: 정부의 복지책임인식의 세계적 확산

대표집필 : 정한울·곽소희

제3차 발표

20개국 여론조사 (엠바고 GMT 2008. 11. 10 21:01-한국시간 2008. 11. 11 05:00)

차수	한국발표	주제	비고
1차	9월 11일	9.11 테러의 배후에 대한 국제인식 비교	9 · 11 테러 7주기
2차	10월 16일	세계 기아문제와 선진국의 책임	세계 식량의 날 (10.15)
3차	11월 10일	경제위기하 세계인의 복지수요와 정부만족도	

발표내용

1. 경제위기와 세계 각국의 복지 수요 및 만족도 비교
 복지의 정부책임론 일반화, 정부의 복지정책 만족도에는 편차 커
2. 한국인의 복지인식 양극화 평가
3. [보론] 기초생계 · 의료 · 교육 분야별 정부 복지활동 평가

조사개요

2008년 두 번째 월드퍼블릭오피니언(WPO) 국제여론조사
 미국 매릴랜드 대학의 국제여론조사 연구기관인 국제정책태도프로그램(PIPA)이 운영하는 월드퍼블릭오피니언(<http://www.WorldPublicOpinion.org>) 프로그램은 유엔고등인권판무관(UHCHR)의 협조 아래 유엔인권선언 채택 60주년을 기념하여 세계 인권의식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국제여론조사를 실시하였다. 동아시아연구원(EAI원장 : 이숙중 성대 행정학과 교수, <http://www.eai.or.kr>)과 경향신문(<http://www.kyunghyang.com>)은 한국 측 조사주관기관으로 참여한다. 이번 조사는 2008년 상반기에 진행한 국제인권선언 60주년 기념 여론조사에 이어 두 번째 진행되는 조사로서 국제현안 및 주요 인권문제에 대한 세계인의 여론을 소개한다.

경향신문사 · EAI동아시아연구원 여론분석센터 연구팀

조사국가 : 22개국 (조사기간 2008. 7.15-9.26)

미주	멕시코, 미국, 아르헨티나
아시아	인도, 인도네시아, 중국, 한국
유럽/유라시아	독일, 러시아, 영국, 우크라이나, 이탈리아, 프랑스
중동	아제르바이잔, 팔레스타인, 터키, 이집트, 요르단
아프리카	케냐, 나이지리아

- 대만은 전체 평균산정 시 제외

연구팀

연구팀장 : 이내영 (EAI 여론분석센터 소장,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장)
연구진 : 이숙중 (EAI 원장, 성균관대 교수), 서상민(EAI 연구기획국장), 정한울 (EAI 여론분석센터 부소장), 신영환(EAI 외교안보센터), 곽소희(EAI 연구원)
문의 : 정한울(hwjeong@eai.or.kr 02-2277-1683 내선 102, Fax: 02-2277-1684)

한국 조사방법론

조사일시 : 2008.8.28~29
조사대상 : 19세 이상 전국성인남녀
표본수 : 600명
표본추출 : 층화확률표본추출(Stratified Random Sampling)
표집오차 : 95%신뢰수준 $\pm 4.0\%$
조사방법 : 컴퓨터를 이용한 전화면접조사(CATI)
응답율 : 20.5%
조사기관 : 한국리서치

부록1. 조사방법론**부록2. 국제여론조사 연구협력기관**

이슈1. 복지의 정부책임에 대한 사회적 합의, 전 세계적으로 확산

- 세계인 10명 중 9명은 “기초 복지 제공(생계/의료/교육)은 정부책임” 사회적 합의
- 정부가 제공하는 복지수준에 대한 평가에서는 나라별 편차 커
 - 복지 만족도 상위국 : 중국 76%, 독일 65%, 영국 64%
 - 복지 만족도 중위국 : 프랑스 50%, 한국 48%, 미국 48%
 - 복지 만족도 하위국 : 러시아 24%, 아르헨티나 13%, 우크라이나 10%

올 상반기를 강타한 유가상승 및 최근의 미국발 금융위기로 세계경제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면서 각국 국민들의 복지수요가 커지고 있다. 정부가 복지를 책임지라는 각국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이는 국제여론연구기관인 월드퍼블릭오피니언(WorldPublicOpinion.org)과 한국의 EAI동아시아연구원·경향신문이 세계 22개국 21,32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제여론조사 결과를 통해 확인된다.

생계, 의료, 교육 등 세 부분으로 나누어 조사한 결과를 종합하여 평균을 내보면 세계인의 10명 중 9명은 이들 부분에 대한 복지수요를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국이 인도네시아, 요르단 등과 함께 복지를 책임지는 것이 정부역할이라는 주장에 무려 97%가 동의함으로써 가장 높은 지지율을 기록했다. 그 외 이탈리아(95%), 독일(94%), 영국(92%) 등 주요 OECD 나라 국민들의 90% 이상이 정부의 복지책임론을 주장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인도(68%), 미국(78%), 이집트(81%)에서 정부가 기초 복지를 책임져야 한다는 인식의 강도가 약했다. 그러나 이들 나라들에서조차 정부가 국민의 기초생계, 의료, 교육을 책임져야 한다는 응답은 평균 열 명 중 일곱 명 꼴로서 정부가 복지를 책임져야 한다는 데 사회적 합의가 형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최근 미 대선에서 오바마 후보가 승리한 데에는 열 명 중 여덟 명이 정부가 국민들의 기초 복지를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등 정부의 복지역할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형성된 것이 유리하게 작용했을 것으로 짐작된다[표1 A. 참조].

그러나 각국 정부가 국민들의 기초생계제공, 의료보장, 교육기회제공 분야에서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 결과를 평균 내보면 나라별로 큰 편차가 확인된다.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달성하고 있는 중국에서 정부가 이들 영역에 대한 복지제공을 잘하고 있다는 평가가 76%에 달해 22개 조사국가 중 1위를 기록했다. 서구 선진국 중에서는 독일, 영국 국민들 중 각각 65%, 64%가 정부의 복지능력에 대한 신뢰를 밝힘으로써 국민들의 복지만족도에서 상위권을 유지했다. 그러나 경제침체로 오래 고생해온 프랑스나 최근 금융위기의 진원지가 된 미국은 이미 국민들로부터 미온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프랑스 국민의 50%, 미국국민의 48%만이 현 정부가 국민들의 복지수준을 유지하도록 자기 책임을 잘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한국도 48%로 전체 조사대상국 중 13번째 수준으로 중하위 그룹을 형성했다. 그 외 소연방 해체이후 극심한 빈부격차를 경험하고 있는 러시아(24%), 우크라이나(10%)와 경제회생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아르헨티나(13%) 등이 국민들로부터 긍정적 평가가 가장 낮은 복지후진국으로 분류된다.

[표1] 기초 복지 제공의 정부책임여부 및 정부의 복지제공 만족도 국가별 비교 (%)

A. 정부 책임론순위	국가	“정부가 기초복지 (생계/의료/교육) 책임져야 한다”	B. 복지 만족도순위	국가	“우리나라 정부가 기초복지 책임을 잘하고 있다”
1	인도네시아	97	1	중국	76
1	요르단	97	2	요르단	73
1	중국	97	3	팔레스타인	65
4	아르헨티나	96	3	독일	65
4	케냐	96	5	케냐	64
6	이탈리아	95	5	영국	64
7	대만	94	7	대만	57
7	독일	94	8	아제르바이잔	56
7	멕시코	94	9	인도	55
7	우크라이나	94	10	터키	53
11	터키	93	11	인도네시아	52
11	아제르바이잔	93	12	프랑스	50
13	영국	92	13	한국	48
14	한국	91	13	미국	48
15	나이지리아	90	15	멕시코	47
16	러시아	89	16	이집트	45
16	프랑스	89	17	이탈리아	43
18	태국	88	18	태국	38
19	팔레스타인	81	19	나이지리아	33
20	이집트	80	20	러시아	24
21	미국	78	21	아르헨티나	13
22	인도	68	22	우크라이나	10
	평균	90		평균	48

자료: WPO · EAI 동아시아연구원 · 경향신문(2008)

• 정부의 복지책임론, 상당기간 지속될 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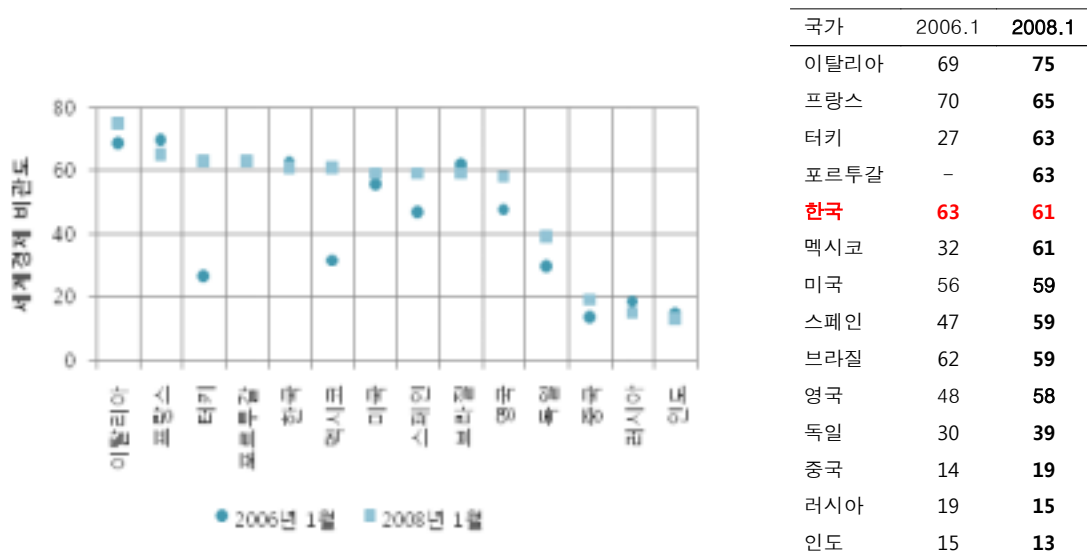
세계경제에 대한 확산된 비관적 인식과 미국발 금융위기의 불확실성 지속

세계 각국에서 사회복지에 대한 정부책임 인식이 확산된 데에는 무엇보다 세계경제의 침체와 불안이 작용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EAI동아시아연구원이 영국BBC방송 국제여론조사 컨소시엄에 참여하여 2008년 1월과 2006년 1월에 발표한 전 세계 35개국 국제경제인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 해에는 2006년도에 비해 대부분의 주요 조사 국가들에서 세계경제에 대한 비관적 평가가 크게 확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08년 조사에서 세계적으로 경제적 비관이 심각한 것으로 알려진 이탈리아(75%), 프랑스(65%)를 비롯해 주요 선진국 국민들의 과반수 이상이 세계경제를 비관적으로 평가했다. 특히 2006년 조사에서는 OECD 국가들 중 상대적으로 비관적 평가가 약했던 영국, 독일, 스페인, 터키, 멕시코에서 부정적인 평가가 늘어남으로써 세계경제에 대한 비관론으로 수렴되는 경향을 보여준다. 한국 역시 세계경제가 악화되고 있다는 비관적 인식이 61%로 OECD 국가 중 5번째 비관적 평가가 높았

다. 다만 세계신흥경제강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소위 브릭스국가 들 중 중국, 인도, 러시아 국민들은 세계경제를 매우 낙관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은 예외적인 현상으로 볼 수 있다. 세계경제가 악화되고 있는 비관적 평가응답은 인도 13%, 러시아 15%, 중국이 19%였다.

이번 조사는 미국발 금융위기가 본격화되기 시점의 조사결과이기 때문에 금융위기 이후의 충격이 반영되어 있지 않다. 만약 현 시점에서 세계금융위기의 충격까지 고려할 경우 각 국의 복지정책에 대한 수요가 더욱 강화되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이번조사 결과는 1980년대 이래 확산되어 온 시장주의 및 신자유주의적 정책에 대한 반발이 최근의 금융위기 이전에 이미 전세계적으로 확산되어 있었다는 것을 말해준다. 복지를 위한 정부개입 요구가 현 경제상황 악화에 따른 일시적 현상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시사한다. 현 경제위기의 회복 시점을 예측하기 어려운 조건에서 정부개입에 의한 복지확대를 요구하는 세계여론은 상당기간 장기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1] OECD 및 BRICs 국민들의 세계경제 비관적 평가 비율 (%)



자료: BBC · EAI 동아시아연구원(2006; 20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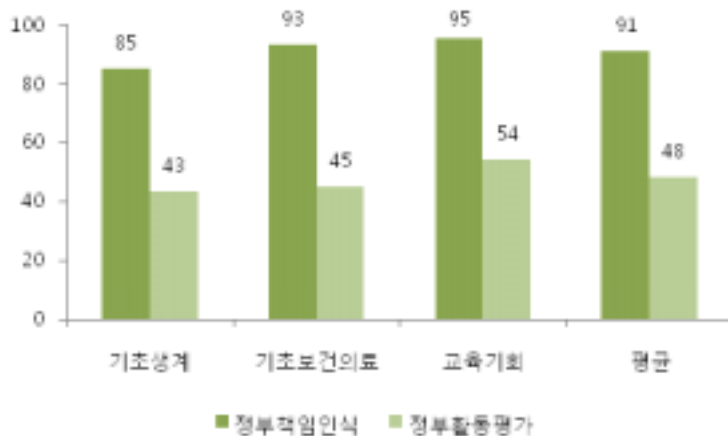
이슈2. 한국사회, 정부의 복지책임론 합의, 정부의 복지정책 평가는 양극화

- 한국인 91% “기초 복지 제공(생계/의료/교육)하는 것은 정부책임”
 - 각 영역별 정부 책임론 : 생계보장(85%), 의료보장(93%), 교육기회제공(95%)
- 이명박 정부의 복지정책에 대한 평가는 반반 엇갈려. 48%가 잘한다
 - 정부 “잘한다” : 생계보장(43%), 의료보장(45%), 교육기회제공(54%)

한국 국민들 역시 91%가 국민에게 기초생계, 기초의료, 최소한의 교육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정부의 몫으로 인식하고 있다. 기초생계에 대해서는 85%, 기초의료보장에 대해서는 93%가 정부의 책임이라고 답했고, 최소한의 교육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정부의 책임이라는 주장에는 무려 95%가 동의했다. 평균하면 한국인의 91%가 정부에게 기본적인 복지제공의 의무가 있다는 인식에 동의함으로써 복지를 위한 정부 개입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한국사회에 강하게 뿌리내리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현 정부가 각 분야 복지를 얼마나 잘 보장하는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기초생계제공을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43%, 기초의료를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는 45%가 잘하고 있다고 답해 과반수에 약간 미치지 못했다. 교육기회를 제공하는 과제에 대해서는 과반수가 넘는 54%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세 분야를 종합하여 평균하면 대략 과반수에 육박하는 48%의 국민들이 현 정부의 복지활동에 긍정적인 평가를 했고 나머지 절반의 응답자들은 부정적이거나 무관심한 태도를 보였다.

[그림1] 3대 복지영역별 정부책임 인식 및 정부의 복지제공 활동에 대한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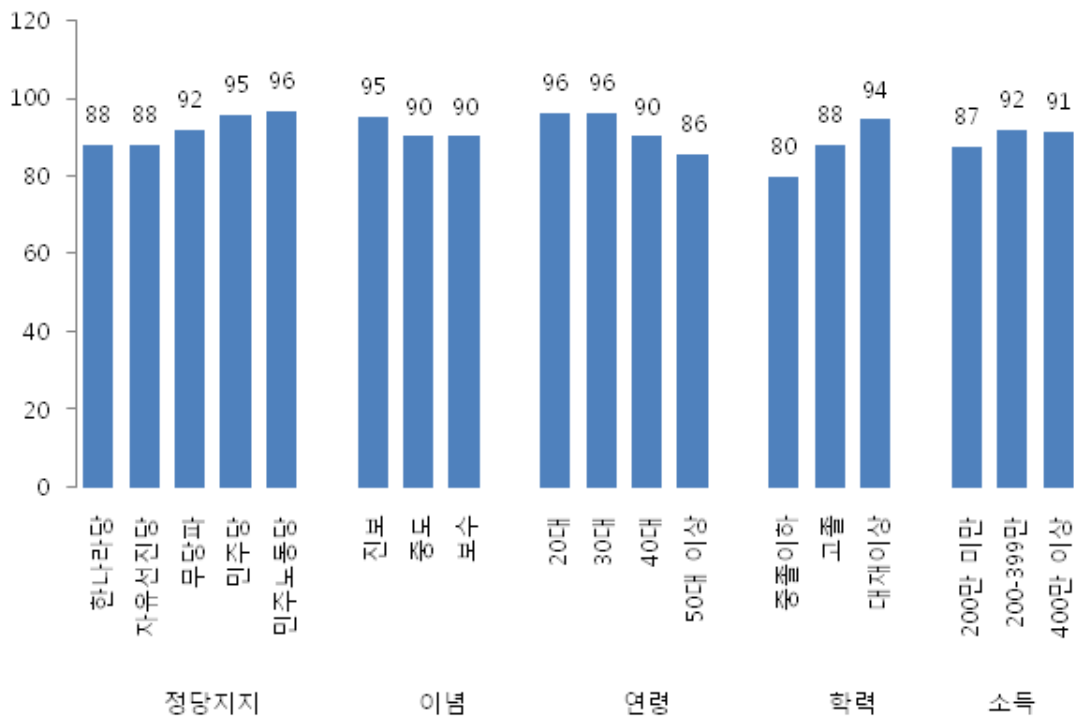


자료: WPO · EAI 동아시아연구원 · 경향신문(2008)

- 복지가 정부책임이라는 사회적 합의 존재, 정치적, 이념적 갈등 없어
 - 정부책임론 : 한나라당 지지자 88%, 민주당 95%, 자유선진당 88%, 민노당 96%
 - 진보 95%, 보수층 90%가 “복지는 정부 책임” 한 목소리

정부가 복지를 책임져야 한다는 복지인식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존재한다는 것은 지지정당이나 이념성향에 따라 큰 차이 없다는 데에서 확인된다. 복지를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는 입장이 진보성향인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을 지지하는 층에서 각각 95%, 96%였다. 보수성향인 한나라당 지지자와 자유선진당 지지자들도 88%가 같은 의견을 보였다. 이념성향에서도 진보라고 응답한 층의 95%가 복지에 대한 정부책임을 강조했다지만, 중도 혹은 보수층에서도 무려 90%가 같은 응답을 해서 만장일치에 가까운 공감대를 보이고 있다. 세대별, 교육수준별로 보더라도 보수성향의 고연령층과 중졸이하 저학력층의 응답자들이 젊은 세대와 고학력층에 비해 찬성비율이 상대적으로 약하기는 하지만 대체로 이들 집단에서도 80% 이상이 정부의 복지책임을 강조하고 있다.

[그림2] 정치·이념·사회경제적 집단별 정부의 복지책임인식 차이(%)



자료: WPO · EAI 동아시아연구원 · 경향신문(20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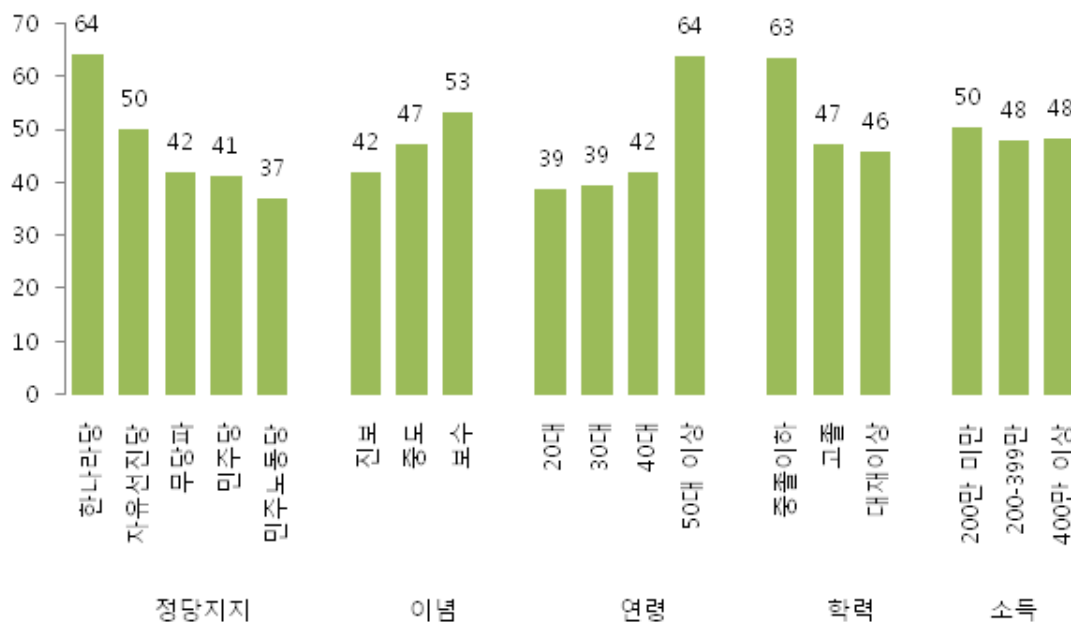
- 정부가 제공하는 복지 평가, 정치적 입장에 따라 온도차 커
 “이명박 정부 복지 책임 잘하고 있다” 비율
 - 한나라당 지지자 64%, 자유선진당 50%, 민주당 지지자 41%, 민노당 36%
 - 20대 39%, 30대 39%, 40대 42%, 50대 이상 64%
 - 중졸 63%, 고졸 47%, 대재이상 46%
 - 소득별로는 편차 크지 않아

그러나 복지제공을 위한 정부활동을 종합평가한 결과에서는 정치적, 이념적, 사회경제적 지

위에 따라 상당한 인식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우선, 정당지지별로 보면 보수성향의 한나라당 지지층의 경우 64%, 자유선진당 지지자의 50%가 이명박 정부의 복지정책 전반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무당파 혹은 민주당 지지자의 경우 정부의 복지제공 활동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사람이 각각 42%, 42%로 한나라당, 자유선진당 지지자에 비해 줄어든다. 민주노동당 지지층에서는 37%로 더 큰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정부의 복지활동을 바라보는 시각차이는 이념성향별로도 뚜렷하게 대비된다. 보수적 응답층의 53%가 정부의 복지보장활동을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반면, 진보층에서는 42%에 불과했다. 연령별로 보면 역시 50대 이상층에서 64%가 정부가 복지 제공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20대와 30대는 39%, 40대에서는 42%에 그쳤다. 응답자의 학력별로 분류해보면, 중졸 이하의 저학력 층에서 63%, 고졸 47%, 대재이상 층의 46%가 정부의 복지활동을 잘했다고 평가해 크게 대비되고 있다. 다만 소득별로는 큰 차이를 발견할 수 없었다.

한국인의 복지인식을 살펴보면 ‘정부가 기초적인 국민복지의 책임을 져야한다’는 사회적 합의를 이루고 있다. 이는 한동안 영향력을 행사했던 ‘시장’의 조절능력을 신뢰하는 시장주의적 시각 대신 복지국가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상당한 규모로 확산되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복지를 위한 정부개입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복지정책을 펼쳐나가는 과정에서 상당한 정치적, 이념적 갈등이 수반될 것으로 판단된다. 무엇보다 실제 정책과 정부의 복지능력에 대해 평가할 때는 지지정당 혹은 이념적 당파성에 따라 판단이 좌우되고 있다. 이는 정부의 복지정책과 방향에 대해 객관적인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정치적, 이념적 편견이 작용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합리적 토론과 타협대신 감정적인 대립과 갈등이 지속될 가능성을 시사하는 결과이다.

[그림3] 정치·이념·사회집단 별 정부의 복지보장 활동에 대한 긍정적 평가비율(%)



자료: WPO · EAI 동아시아연구원 · 경향신문(2008)

보론1. 기초생계(식량)·의료·교육 분야별 정부의 복지활동 평가

3대 복지영역 각각에서 제기되는 국민들의 복지수요를 정부가 충족시켜야 한다고 보는지 그리고 자기나라 정부가 각각의 영역에서 제공하는 복지수준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대한 세계인의 인식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세계인들은 기초생계를 보장하고, 기본적인 의료보장을 제공할 뿐 아니라 최소한의 교육기회를 보장하는 것은 정부의 책임이라는 데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22개국 87%의 응답자는 “정부가 기초생계를 보장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으며 92%는 “정부가 기초 의료보장을 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정부가 최소한의 교육기회를 국민들에게 제공해야 한다는 인식에도 91%가 동의하고 있다.

둘째, 생계/의료/교육 분야별로 자국 정부의 복지활동을 평가하면 긍정적 평가와 부정적 평가가 엇비슷하게 나타나지만, 나라별로는 적지 않은 편차를 확인할 수 있다. 기초생계 보장하는 데 자기나라 정부가 잘하는 응답은 45%였고, 보건의료 보장활동에 대해서는 47%가 잘하고 있다고 답했다. 교육기회를 제공하는 역할에 대해서는 52%가 자기나라 정부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그림1]참조). 분야별 구체적인 국가순위에서 나타나는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표1]참조).

기초생계보장 정부평가 상위 5위, 하위 5위

중국(89%), 독일(87%), 요르단(67%), 팔레스타인(61%), 영국(59%) 국민들이 기초생계를 보장하는 정부의 책임활동에 대해 상위 5위에 속했다. 아르헨티나(14%), 우크라이나(15%), 나이지리아(22%), 러시아(24%), 태국(25%)이 기초생계보장을 위한 정부평가에서 하위 5위 권안에 들었다.

기초의료보장 정부평가 상위 5위, 하위 5위에 대한 정부평가

기초의료보장을 잘한다고 평가받은 상위 5개 국가는 요르단(74%), 대만(72%), 중국(68%), 영국(66%), 케냐 및 팔레스타인(65%) 이었다. 반면 하위 5위안에 든 나라로는 우크라이나(5%), 아르헨티나(14%), 러시아(14%), 미국(30%), 태국과 나이지리아(각각 42%)가 꼽혔다.

기본교육기회제공 정부평가 상위 5위, 하위 5위

이 분야에서 정부가 복지책임을 잘하고 있는 국가로는 케냐(86%), 요르단(77%), 중국(71%), 팔레스타인(69%), 영국(66%)가 상위 5위안에 들었다. 하위 5위안에 든 국가들로는 아르헨티나와 우크라이나(각 11%), 러시아(35%), 나이지리아(36%), 독일과 대만(각각 44%)이 있다.

세 영역별로 고르게 높은 평가를 받은 국가로는 서구 선진국 중 영국, 독일 정도를 꼽을 수 있다. 독일을 복지선진국으로 분류할 만 하다. 독일의 경우 기초생계분야에서는 87%라는 높은 평가를 받았을 뿐 아니라, 의료제공평가에서도 63%로 긍정적 평가가 높았다. 다만 교육분야에서는 44%로 긍정적 비율이 크게 떨어져 하위 5위권에 속하는 것이 흠이다. 그러나 세 분야 지지율을 평균 낸 종합적인 만족도 평가에서는 전체 22개국 중 세 번째로 좋은 평

가를 받았다. 종합점수 미국은 반대로 교육분야(61%)와 기초생계부분(52%)에서 과반수 이상의 지지를 받았지만, 기초의료보장 차원에서는 30%의 긍정적 평가를 얻는 데 그쳤다. 미국 대선에서 의료복지개혁이 주요 쟁점으로 떠오른 배경을 이해할 수 있는 대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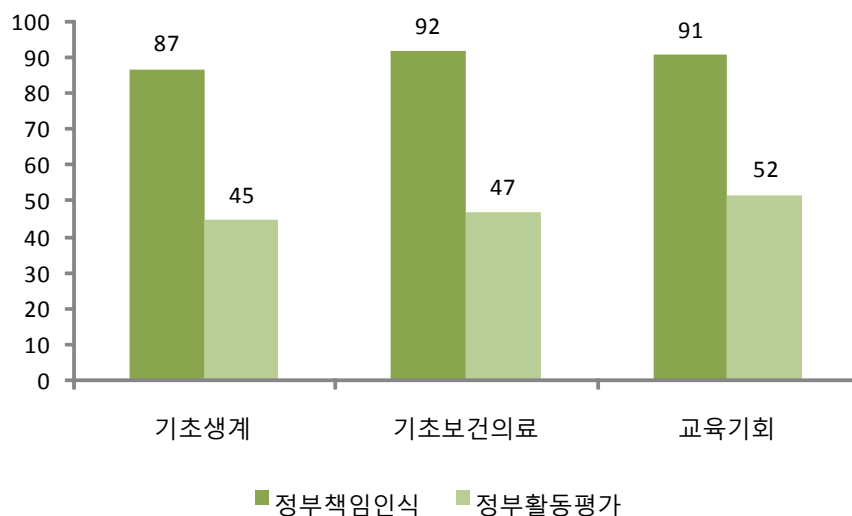
반면 서구선진국 중 최근 경제에 대한 비관적 인식이 상당히 팽배해있는 프랑스와 이탈리아는 세 분야 각각에서 국민들의 평가가 냉담하여 중하위권에 포진해있다. 프랑스 정부는 전체 22개 중에서 기초생계지원 평가에서 긍정적 평가 비율을 기준으로 14위(42%), 기초의료보장 부문에서 10위(54%), 교육 분야에서 11위(55%)에 그쳤다. 이탈리아는 더 심각하다. 기초생계지원에서 17위(38%), 기초의료보장 영역에서 15위(44%), 교육분야에서 15위(46%)로 최소한 복지정책 차원에서는 선진국 대열에 포함하기 어려울 정도이다.

선진국에 속하지 않으면서도 각국 세부복지평가에서 좋은 평가를 받은 나라로는 중국, 인도, 요르단, 팔레스타인 등을 꼽을 수 있다. 이들 국가들의 경우 객관적인 복지 환경은 매우 미흡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 의외의 결과이다. 이들 국가들이 상위순위에 오른 것은 객관적인 성과보다도 국민들의 자기나라 정부에 대한 정서적 신뢰가 크게 작용한 결과로 보인다. 특히 중국과 인도의 경우 세계경제의 주목을 받으며 급성장해온 동력이 국민들 사이에 정부의 복지정책에 대한 긍정적 인식과 정치적 신뢰로 이어진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반면 중국이나 인도와 함께 신흥경제강국으로 떠오르고 있는 러시아의 경우 국민들로부터 낮은 평가를 받아 대비가 된다. 러시아는 기초생계 분야에서 19위(24%), 기초의료제공분야(14%), 교육제공분야에서 20위(35%)로 밑바닥에 머물러 있다. 같은 구 소연방 소속국가였던 우크라이나와 남미의 장기 경제침체를 겪어온 아르헨티나 등은 국민들의 냉담한 평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한국은 기초생계지원 영역에서 13위(43%), 기초의료보장 영역에서 13위(47%), 기본적인 교육기회제공 부문에서는 12위(54%)에 머물러 복지중진국 수준에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림1] 사회복지 3대 영역 정치책임인식 및 자국 정부 분야별 복지활동 평가(%)



[표1] 기초생계/의료보장/교육기회제공 영역별 정부책임 인식과 정부활동 평가 (%)

“다음 각 영역을 보장하는 것의 정부의 책임이다” (복지영역별 정부 역할인식)									“다음 각 영역을 보장하기 위한 활동을 정부가 잘하고 있다” (정부 평가)								
순위	국가	기초생계	순위	국가	기초의료	순위	국가	교육기회	순위	국가	기초생계	순위	국가	기초의료	순위	국가	교육기회
1	인니	97	1	인니	97	1	중국	98	1	중국	89	1	요르단	74	1	케냐	86
2	중국	96	2	요르단	97	2	아르헨	98	2	독일	87	2	대만	72	2	요르단	77
3	케냐	96	3	우크라	97	3	인니	97	3	요르단	67	3	중국	68	3	중국	71
4	요르단	96	4	이탈리	97	4	터키	97	4	팔레스	61	4	영국	66	4	팔레스	69
5	아르헨	94	5	아르헨	97	5	요르단	97	5	영국	59	5	케냐	65	5	영국	66
6	아제르	93	6	대만	96	6	영국	96	6	아제르	57	5	팔레스	65	6	아제르	64
7	독일	93	7	중국	96	7	멕시코	96	7	대만	56	7	독일	63	7	미국	61
8	대만	92	8	케냐	96	8	대만	95	8	인도	53	8	터키	57	8	인도	59
9	이탈리	92	9	터키	96	9	한국	95	9	미국	52	9	인니	55	9	인니	57
10	우크라	89	10	아제르	96	10	케냐	95	10	터키	47	10	프랑스	54	10	터키	56
11	멕시코	89	11	러시아	96	11	우크라	95	11	인니	44	11	인도	52	11	프랑스	55
12	터키	87	12	멕시코	96	12	이탈리	95	11	멕시코	44	11	멕시코	52	12	한국	54
13	영국	86	13	나이제	95	13	러시아	94	13	한국	43	13	한국	47	13	이집트	53
14	프랑스	86	14	독일	95	14	독일	93	14	프랑스	42	14	아제르	46	14	태국	47
15	태국	85	15	한국	93	15	나이제	91	15	케냐	41	15	이탈리	44	15	이탈리	46
16	한국	85	16	영국	93	16	태국	90	16	이집트	39	16	이집트	43	15	멕시코	46
17	나이제	84	17	프랑스	92	17	아제르	89	17	이탈리	38	17	태국	42	17	대만	44
18	이집트	82	18	태국	88	18	프랑스	89	18	태국	25	17	나이제	42	17	독일	44
19	팔레스	80	19	이집트	81	19	팔레스	85	19	러시아	24	19	미국	30	19	나이제	36
20	러시아	77	20	팔레스	79	20	미국	83	20	나이제	22	20	러시아	14	20	러시아	35
21	미국	74	21	미국	77	21	이집트	77	21	우크라	15	21	아르헨	14	21	우크라	11
22	인도	70	22	인도	70	22	인도	64	22	아르헨	14	22	우크라	5	22	아르헨	11
평균		87	평균		92	평균		91	평균		45	평균		47	평균		52

자료: WPO · EAI 동아시아연구원 · 경향신문(2008)

[부록1] 방법론 (출처: 월드퍼블릭오피니언 www.WorldPublicOpinion.org)

	Sample Size (unweighted)	MoE (%)	Field dates	Survey methodology	Type of sample
China	1011	3.2	Jul 26 - Aug 2, 2008	Telephone	National ¹
Egypt	600	4.0	Jul 21 - Aug 1, 2008	Face-to-face	Urban ²
France	600	4.1	August 5 - 12, 2008	Telephone	National
Germany	1008	3.1	Jul 15 - Aug 12, 2008	Telephone	National
Great Britain	803	3.5	Jul 31 - Aug 8, 2008	Telephone	National
Indonesia	716	3.7	Jul 26 - Aug 18, 2008	Face-to-face	National ³
Italy	552	4.3	July 16-30, 2008	Telephone	National
Jordan	583	4.1	August 12-15, 2008	Face-to-face	National
Kenya	1000	3.2	July 17-30, 2008	Face-to-face	National
Mexico	850	3.4	August 9-10, 2008	Telephone	National ⁴
Nigeria	1000	3.2	August 9-18, 2008	Face-to-face	National ⁵
Palestinian territories	638	4.0	August 1-7, 2008	Face-to-face	National ⁶
Russia	3209	3.5	Jul 18-22 and Aug 15-20, 2008	Face-to-Face	National ⁷
South Korea	600	4.1	August 28-29, 2008	Telephone	National
Taiwan	823	4.1	August 22-31, 2008	Telephone	National
Turkey	1023	3.1	Jul 28 - Aug 18, 2008	Face-to-face	National
Ukraine	1047	3.1	August 9-21, 2008	Face-to-face	National

1 In China, the survey was a probability sample of urban and rural households with land-line telephones in the provinces of Anhui, Hebei, Heilongjiang, Hubei, Jiangsu, Shanxi, Shanghai, Sichuan, and Yunnan—representing approximately 60 percent of the mainland Chinese population. The sample was 40 percent rural, 60 percent urban (rural households make up approximately 55 percent of the population).

2 In Egypt, the survey was executed in the urban areas of Cairo, Alexandria, Giza, and Subra. These four urbanized areas represent 75 percent of Egypt's urban population, which is 42 percent of the national population.

3 In Indonesia, a national probability sample was conducted in both urban and rural areas and covering approximately 87 percent of Indonesia's population.

4 In Mexico, a random telephone sample of adults who had landline telephones was conducted in all 31 states and the Federal District. Telephone penetration in Mexico is 55 percent.

5 In Nigeria, the sample was developed by selecting six states, one per geographic region, based upon their size and representativeness. Within each state, sampling points were selected by means of a multi-stage random sample which disproportionately sampled urban areas. The final sample is 75 percent urban; Nigeria is approximately 50 percent urban.

6 In the Palestinian territories, a face-to-face national probability survey was conducted among the population of the West Bank, including East Jerusalem, and the Gaza Strip.

7 In Russia, all items were half sampled; each item was answered by at least 800 respondents.

[부록2] WPO 프로젝트 연구협력기관 (RESEARCH PARTNERS)

Country	Research Center	Contact
China	Fudan Media and Public Opinion Research Center (FMORC), Fudan University	Dr. Baohua Zhou
Egypt	Attitude Market Research	Mr. MohamedAlGendy +202 22711262
France	Efficienc3	Mr. Samuel Lee +33 3 26 79 03 59
Germany	Ri*Questa GmbH	Dr. Bernhard Rieder +49 (0)7641 934336
Great Britain	Chatham House (RoyalInstituteofInternationalAffairs) / Facts International	Dr. Robin Niblett +44 (0)20 7314 3667
Indonesia	Synovate	Ms. Eva Yusuf (+62-21) 2525 608
Italy	Demoskopea	Ms. ClaraMariotti +39 06 85.37.52.26
Jordan	Center for Strategic Studies, University of Jordan	Dr. Fares Braizat (+962 6) 5300100
Kenya	Research Path Associates Limited	Mr. Stephen Dimolo Ashers +254-20-2734770
Mexico	Reforma	Dr. Alejandro Moreno +52 56 28 72 35
Nigeria	Market Trends Research International	Mr. Michael Umogun + 234-1 791 79 87
Palestinian territories	Palestinian Center for Public Opinion	Dr. Nabil Kukali (+972-2) 2774846
Russia	LevadaCenter	Ms. Ludmila Khakhulina (+7 095) 229-55-44
South Korea	East Asia Institute Media Partner: Kyunghyang Sinmun	Mr. Han Wool Jeong +82 02-2277-1683
Taiwan	TVBS	Mr. Wang Yeh-Ding +886-2-23568961
Turkey	ARI Foundation / Infakto Research Workshop	Mr. Yurter Ozcan +1 (804) 868 0123 Dr. Emre Erdogan +90 212 231 07 08
Ukraine	Kiev International Institute of Sociology	Dr. Vladimir Illich Paniotto (+38) 044 537-3376 / (+38) 044 501-7403